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 민주노총 과제

2025년 하반기 정세 및 방침_노동정책

» 1 하반기 정세



<1> 내란세력 심판 지지부진, 내란세력 준동

-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거부, 한덕수 등 내란동조 세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과 보수 언론의 선동

<2> 국민의 힘 극우화, 반이재명을 통한 기사회생 모색

- 국민의 힘 극우화,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세력과 연계, 중국 혐오, 부정 선거론 유포
- 노조법·방송법·상법·정부조직법 등 모든 개혁 입법에 대한 방해
- 반이재명, 정치 불신을 부추겨 30% 중반대 지지율 회복

» **1** 하반기 정세

<3> 노동개혁의 더딘 속도, 동력 약화

- 노조법 개정 후속 작업의 지지 부진, 보수 언론과 사용자의 저항
-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성, 초기업 교섭 제도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 일정 미정

<4>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 침략, 동맹 수탈

- 자동차 25%, 철강 50%등 일방적인 관세 부과와 3,500억 불 현금 투자 강요
- 투자 강요에 따른 미국 현지 공장 노동자에 대한 난폭한 탄압과 인권 유린
-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으로 한국경제 불안정, 일자리 위기

» **1** 하반기 정세

<5> 미국 패권 약화, 동북아 정세 불안정

- 트럼프 정권 등장과 일방적 대외 정책으로 미국의 정치적, 도덕적 권위 추락
- 미·중 대립 격화로 동북아, 한반도 전쟁 가능성 확대
-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한·미·일 동맹 탈피와 자주적, 중립적 대외 정책 전환

<6> 노동자, 민중의 힘과 의지로 한국사회 근본적 변화 추동

- 이재명 정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투쟁
- 조직력 확대, 우호적 여론 형성, 조직적 단결과 투쟁

» **2**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개요

- 국가비전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3대 국정원칙 :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 5대 국정 목표
 -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19개 과제)
 -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29개 과제)
 - :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23개 과제)
 - : 기본이 튼튼한 사회 (37개 과제)
 - :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15개 과제)

» **2**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개요

○ 23대 추진전략, 123개 세부 국정과제

○ 노동관련 국정과제 (6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포함)

-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 (75)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 (92)인구변동,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 (93)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94)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95)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96)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 **2** 국정과제 1.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1>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법 체계 구축
- <2>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실효적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 <3>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화·첨단화
- <4> 산재보험 선 보장, 전 국민 산재보험, 신속 처리 실현 등 산재보험제도 혁신
- <5>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 참여권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 <6> 새로운 유해·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 보호

» **2** 국정과제 1.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노동안전 종합 대책 (2025년 9월 15일)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2. 안전 주체 노사 역할 책무 확립
3. 노동안전 확산 위한 인프라 확대
4. 안전 예방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정책방향과
민주노총 대응
영상에서 확인



» **2** 국정과제 2.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1>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 일터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노무 제공자 노동자로 추정,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2>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2025년 8월 개정)

<3>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 **2** 국정과제 2.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4>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혁신

- 하도급 계약시 도급 비용 구분 지급,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확대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과 공정한 보상 실현

-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고용형태 차별 금지, 플랫폼·특수고용 최저임금(보수) 방안

<6> 물류, 수송, 건설 등 국토 교통 취약 노동자 보호 강화

- 택배 야간 배송 과로사 방지, 배달 보험가입 의무화, 화물 안전운임제 재도입, 건설 적정임금제

» **2** 국정과제 2.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평가와 입장**

-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인정(추정 조항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기 앞당겨야
- 노조법 2·3조 개정, 하청·특고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후속 조치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방향 부재
-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노정교섭 보장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와 함께 근로조건(근속·단협) 승계 의무

» **2** 국정과제 2.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평가와 입장**

- 임금체불 반의사 불벌죄 폐지,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특고·플랫폼 최저임금(보수) 방안 관련, 업종별 교섭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여성 집중 직무에 합리적 가치 평가 기준 마련**

» **2** 국정과제 3.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1> 근로자의 날 명칭변경과 전생애 노동교육등 노동존중문화 확산

- 공무원,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단체교섭의제 확대

<2> 노동법원 설립 및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 노동위원회에 특수고용-플랫폼 분쟁조정 기능, 취약노동자 지원기구 활성화

» **2** 국정과제 3.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3> 초기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 구축, 집단교섭 모델 개발
- 산업·업종별 효력 확장 제도, 초기업별 교섭 촉진제도 도입

<4> 사회적 대화 강화 및 각종 의사결정 노동의 참여 보장

- 중층적 사회적 대화 추진
-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 제도화

» **2** 국정과제 3.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평가와 입장**

- 헌법, 노동관계법 ‘노동’ 개념 확대
- 공무원·교원 단체교섭권 보장과 함께 단체행동권 보장
- 노동법원 설립은 원칙적으로 동의, 참심제 등 사법 개혁 과제와 함께 추진
- 특고·플랫폼노동자성 인정을 전제로 노동위원회에 분쟁 조정기능 부여
- 초기업교섭 활성화, 정부모범사용자 역할을 넘어 제도화 방안 마련 필요
- 노동자대표위원회가 형식화 되지 않는 보장 방안 마련, 노동조합 대표성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

» **2** 국정과제 4.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1> 주4.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및 포괄 임금제 금지

- 주4.5일제 시범사업 확산 및 법정 노동시간 단축, 포괄 임금제 금지

<2> 연차휴가제 개선과 쉼이 보장되는 일터 : 연차 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 요건 완화

<3> 육아, 돌봄 국가 보장으로 일·가정 양립 실현 : 자영업자 육아수당 도입

<4> ILO 괴롭힘방지협약 비준, 갑질 없는 일터

» **2** 4.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평가와 입장**

- 교대제 · 야간노동 노동시간 우선 단축,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장시간 노동단축 계획 수립 필요
-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보장, 휴일근무 가산수당 우선 적용
- 특고 · 플랫폼노동자 육아휴직 사용 여건 보장, 작은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률 제고

» **2** 국정과제 5.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1> 고용 서비스 고도화와 전 국민 역량 강화 지원

-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강화, 국민역량계좌제도 도입

<2> 지역재량권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2** 국정과제 5.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3> 구직 지원금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완성 등 든든하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경험요율제 도입

<4> 청년, 여성, 사회적 기업 등 사회 통합적 고용-취업 지원

-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청년 자발적 이직자 1회 구직급여 지급

» **2** 5.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평가와 입장**

- 현장 실습생, 직업 훈련 기간 노동자성 인정, 사회보험 적용
- **사회공공성 강화, 돌봄 등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 계획 부재**

» **2** 국정과제 6. 인구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 노동대전환

<1> 정년 연장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 법정 정년 연장 65세 단계적 입법

<2> 퇴직연금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후 보장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확대

<3> AI 인재 양성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 AI 고용영향 평가, 정의로운 전환

<4> 이주노동자 통합 취업 지원 및 고용허가제 개선 : 일하는 외국인 기본법 제정

» **2** 6. 인구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 노동대 전환 **평가와 입장**

- 법정 정년 연장 조기 시행, 임금체계 개편 노사합의 원칙, 성과급제 도입 저지
-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 AI 도입 고용안정 산업전환고용안정 전문위원회 노동자 참여 보장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도입, ILO 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 **3** 노조법 2·3조 개정 : 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사용자 정의 확대

-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2> 쟁의범위 확대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업주 단협 위반에 대한 쟁의 합법화
: 정리해고, 외주화 등 구조조정 사안에 쟁의 행위 가능

» **3** 노조법 2·3조 개정 : 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

<3> 손해배상에서 부진정 연대책임

-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함

» **3** 노조법 2·3조 개정 : 원청교섭 현실화 과제

-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강제방안
- 교섭의제 범위(임금·성과급·근로조건·노동안전·노조활동 등)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 교섭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조활동에 대한 원청의 지배개입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 교섭창구 단일화 : 원하청 공동교섭, 하청 공동교섭, 자율교섭
- 하청·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화, 전 조직적인 투쟁 태세와 사회적 여론을 통한 압박

» **4**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방향 : 이재명 정부와 노동정세

- 윤석열 정권 탄핵과 이재명 정부의 등장은 노동운동의 성장, 발전에 유리한 조건 형성
- 탄핵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정치적 영향력 확대,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정책 폐기, 현안 투쟁 사업장의 완강하고 공세적인 투쟁, 노조법 개정 쟁취
-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은 개혁적인 의제 설정은 긍정적이지만 노조법 개정 후속 작업, 특고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방안, 초기업교섭 제도화 등 구체적 제도 설계 과정에서 본질적 내용이 변질되거나 왜곡될 가능성

» **4**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방향 : 이재명 정부와 노동정세

- 노동정책 자체의 불철저성과 함께 한미 정상 회담에서 확인되듯이 대미 종속성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수탈과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어려움
- 주체의 투쟁과 조직력, 사회적 여론에 따라 노동개혁 정책의 지속, 진전 여부 결정
- 유리한 사회정치적 조건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조직 확대사업,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제도화를 실현해야 함

» **4**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방향 1. 노동기본권 쟁취

<1>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3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보장
- 근로기준법에 <노무제공자는 노동자로 추정한다> 조항 추가

<2> 초기업교섭 제도화,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적용

- 노동시장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초기업 교섭 제도화·활성화
- 지역·업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에게도 단체협약 적용 확대

» **4**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방향 1. 노동기본권 쟁취

<3> 안전하게 일할 권리, 작업중지권 보장

- 비정규직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 금지, 노동안전 활동시간 보장

» **4**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방향 2. 노정교섭 쟁취

- 정권의 필요에 의해 진행돼 온 노사정 대화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정교섭 정례화, 제도화
- 현안 문제 해결, 간헐적 대화 창구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복합 위기 해결의 주체로 노동 단체와의 대화와 교섭
- 비정규직,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 산업정책과 사회개혁을 위해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중층적 노정교섭 실현

» **4**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방향 3. 평등-노동헌법 여론화

헌법 개정을 통해 내란 세력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이행

<1> 민주헌법

- 국민발안 · 국민투표 ·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민주권 실현, 연동형 선거 제도와 결선 투표제 도입

<2> 평화헌법

- 자주적 중립 외교와 평화통일 지향, 헌법 위에 군림하는 한미동맹 · 국가보안법 철폐

» **4**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방향 3. 평등-노동헌법 여론화

헌법 개정을 통해 내란 세력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이행

<3> 평등헌법

- 교육 · 의료 · 돌봄 · 주거권 보장, 고용상 지위와 성적 지향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4> 노동헌법

- 모든 시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일자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 **4**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방향 4. 트럼프의 경제수탈 반대

- 미국 트럼프 정권, 한국 정부에 3,500억 불(약 500조 원) 대미 투자 압박
- 3,500억 불의 정부 투자만이 아니라 1,500억 불에 이르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재벌의 직접 투자 강요
-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러 간 한국 노동자를 중범죄자로 몰아 체포, 구금
- 3,500억 불은 대미 투자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탈이며 외환보유고의 85%로 한국경제를 제2의 외환위기로 몰아갈 것. 재벌들이 투자하는 1,500억 불은 한국의 대미 수출을 줄이고 제조업 공동화, 한국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

» **4**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방향 4. 트럼프의 경제수탈 반대

-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부과와 강도적 행각은 몰락하는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을 수탈하고 세계 경제를 혼란과 침체로 몰아넣고 있음
- 세계를 전쟁과 공황으로 몰아가는 미국에 대한 규탄과 새로운 세계 질서 수립 요구
- 내란세력 청산에 이어 한국 민중의 수탈자, 미국에 대한 규탄과 투쟁

» **5** 민주노총 2025년 ~2026년 투쟁 흐름

✓ 2025년

10월 : 국정감사 대응(노동기본권 확대 · 내란 청산)

: 미국 통상 압력, 경제 수탈 저지

11월 : 전국노동자대회(노동기본권 쟁취 · 경제 수탈 저지)

: 노조법 개정 후속 대응, 민주노총 30주년 사업

12월 : 노동기본권 입법, 내란 세력 완전 청산

» **5** 민주노총 2025년 ~2026년 투쟁 흐름

✓ 2026년

1월~2월 : 투쟁 태세 구축, 지방선거 대응 방침 수립, 신년 투쟁 선포

3월 : 원청교섭 쟁취 투쟁 본격화, 선포 기자회견, 동시 교섭 요구

4월 : 노동안전 입법 · 정책 쟁취 집중 투쟁

5월~6월 : 노동절 대회, 원청교섭 쟁점화 투쟁, 지역정부 노동정책 실현 쟁점화

7월 : 원청교섭,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 투쟁

내란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는 민주노총

내란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노동자 생존권을 지킨 민주노총

2025년 하반기, 높은 결의와 투쟁으로
노동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사회

내란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노동자 생존권을 지킨 민주노총

2025년 하반기, 높은 결의와 투쟁으로
노동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사회

노동조합이 한국사회 주인으로 등장하는
세상을 위해 힘차게 투쟁합니다.

내란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노동자 생존권을 지킨 민주노총

2025년 하반기, 높은 결의와 투쟁으로
노동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사회

노동조합이 한국사회 주인으로 등장하는
세상을 위해 힘차게 투쟁합니다.

문의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연락처	02. 2670. 9125, 6

